



유럽연합(EU) 정상 합의, 재정동맹 실행 전망 불투명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연합(EU) 정상들은 12월 10일 어렵게 ‘재정동맹’추진에 합의했으나, 핵심인 법제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나면서 재정동맹 실행 전망이 어두워짐.

-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반롬피이는 영국의 동참 불가로 재정동맹이 EU조약 개정이 아닌 정부 간 조약 형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실행단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, 설사 실현되더라도 회원국 재정을 동맹 취지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.
- Financial Times는 재정동맹과 관련하여 비유로존 EU회원국은 부과되는 요구조건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.
 - 스웨덴 재무장관은 재정동맹과 관련하여 유로존과 같은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원칙이라고 밝힘.
 -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폴란드, 덴마크, 체코의 경우 재정동맹은 비유로존 EU 회원국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함.

■ EU 정상회의의 또 다른 결과물인 ‘IMF 자원 확충’도 실질적으로 돈을 내야 할 주요국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거나 잇따라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됨.

- EU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이 IMF에 1,500억 유로를 지원하고 비유로존 EU국가들이 500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IMF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.
- Financial Times는 유사시 IMF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구제하려는 EU 정상회의 합의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전함.
 - 한편, 일본 재무상은 유럽이 어떻게 더 노력할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일본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.
- Financial Times는 독일이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과 이를 항구적으로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(ESM)의 자금 상한을 각각 5,000억 유로로 고집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.

- 이밖에 유럽중앙은행(ECB)은 IMF를 통한 우회지원에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점과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IMF의 구제 본격화에는 찬성하지만, 지원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.

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EU 정상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.

-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럽연합(EU) 회원국들의 재정동맹 합의에 대해 12월 12일 금융시장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함.
 - 무디스는 재정동맹 협약이 유럽 국가의 등급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금도 줄이지 못했다고 진단함.
 - S&P는 EU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더 강력한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양쪽 부문의 조치가 모두 필요하다고 밝힘.
 - 피치도 유럽 정상들의 합의가 유럽의 신용등급 강등 압력을 완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밝힘.
- 유럽 재정위기국의 국채 금리 쇼크가 재연될 기미가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.
 - 12월 14일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평균 낙찰 금리는 6.47%로 11월 입찰 금리인 6.29%보다 훨씬 높게 형성됨.
 - 이탈리아 국채 입찰 응찰률은 1.42배로 앞선 경쟁률인 1.47배보다 낮아짐.
 - 또한, 12월14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.79%로 전일대비 0.11%p 상승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7%에 다시 근접함.

(Financial Times 12/13, Wall Street Journal 12/14)